

편입학 확대, 교육의 질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박 부 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 편입학 기회가 파격적으로 확대된 직접적인 계기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가 지난 '95년 5월 31일 발표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개위는 이 보고서에서 신교육 체제의 목적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에 두고, 열린 교육 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학점은행제의 도입, 시간제 학생 등록 실시 등과 함께 '대학의 편입학을 용이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개위의 이 제안을 받아 교육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같은 해 12월 '대학의 전과 및 편입학 확대 방안 통보'를 시행하게 된다. 이 통보 내용에 따르면, 대학 2·3학년

을 재학생과 휴학생을 합한 재적생 수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만 편입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의 수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종래의 편입학 제도에서는 군입대 혹은 일반 휴학으로 여석이 발생했을 때 일반 편입 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석만큼 대학 교육 시설의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편입 학생을 위한 여석 수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이 제한'되었고, '전문 대학 졸업생, 독학 학위 취득자 등의 계속 교육기회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에서 휴학이나 입대 휴학 등으로 생겨난' 여석까지 일반 편입학의 여석에

〈표 1〉 연도별 대학 편입학자수 (%)

연도	서울	기타	계
1990	1,503(49.0)	1,563(51.0)	3,066(100.0)
1992	2,116(48.3)	2,266(51.7)	4,382(100.0)
1994	1,594(47.0)	2,924(53.0)	5,518(100.0)
1996	5,776(41.5)	8,152(58.5)	13,928(100.0)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0, 1992, 1994, 1996.

포함시키는 편입학 확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컨대 교육부는 대학 편입학을 용이하게 한다는 교개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종래의 일반 편입학 여석 산출 기준이었던 '재적생수'를 '재학생수'로 바꿈으로써 일반 휴학과 군입대로 인한 여석까지를 일반 편입학의 대상 속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1996년 1학기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편입학 확대 조치는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편입 학생수 증가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0년도에는 3,066명이었던 편입학생수가 그 후 계속 증가하여 '92년에는 약 4,382명, '94년 약 5,518명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이 수는 편입학 확대 조치가 취해진 '96년에는 13,928명으로 전 해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표에 따르면 편입 학생의 서울 집중 현상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여타 지역의 편입학생 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편입학 확대 조치가 취해진 '96년에 더욱 뚜렷하다. 이를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설적인 수준에서나마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편입학 확대 조치로 인하여 여석 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여석은 일반 휴학과와 군

입대자로 인한 것이며, 일반 휴학과와 군입대자가 여타 지역 대학에서보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더 많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재수나 편입학을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들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보다 지방대학에서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대학에서는 여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질적수준 저하를 염려하여 편입 학생을 뽑지 않은 것도 서울 소재 대학의 편입학생 비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편입 지원자를 현재 재학중인 학생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편입을 원하는 두 부류로 대별한다고 할 때, 전자는 현재 재학중인 대학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고, 후자는 4년제 대학이면 일단 성공한 것이므로, 굳이 서울 소재 대학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데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 본다.

현재 일부 지방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원 미달 사태와 대량 중도 탈락 현상은 대학 취학연령 인구의 감소 추세와 그간 계속된 대학 정원의 확대, 대학 신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 지방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정원 미달과 중도 탈락으로 인한 위기 상황도 편입학 확대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취학연령 감소로 인한 대학 지원자수 감소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대학 편입학 확대가 편입학생수 증가에 미친 효과부터 살펴보면, 위의 〈표 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4년 5,518명이었던 편입학생수는 편입학 확대 조치가 취해진 1996년에는 13,928명으로 그 조치는 8,410명의 증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이 수는 전체 4년제 대학생수의 0.64퍼센트에 해당된다. 현재의 정원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숫자가 파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편입학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생수는 1996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편입학 확대 조치로 여석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여석은 일반 휴학자와 군입대자로 인한 것으로, 이들의 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 또한 각 대학 휴학자들의 여석을 편입 학생으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여석 산출이 용이하지 않고, 편입학 후에 이루어지는 재입학, 복학으로 인하여 대학 정원령이 정하고 있는 계열, 학과, 학년 정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입 학생을 위한 여석수는 총원 대비 여석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 편입 학생을 받지 않았던 일부 대학들이 편입 학생을 받아들이는 상황 변화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 대학들은 학생의 질 관리와 대학원 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주어진 학부 정원 자체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터여서 그러한 변화 역시 기대하기 어렵고,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편입학생수 증가에는 큰 효과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본다.

요약하면 일부 지방 대학이 맞고 있는 정원 미달 사태와 중도 탈락 문제는 편입학 확대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학 정원령이 폐지 혹은 변경되어 정원 책정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지 않는 한, 편입학 확대 영향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일부 지방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뒤의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학 입학 정원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데 있다. 우선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졸업자수는 1990년 488천 명에서 1996년 395천 명으로 약 93천 명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의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197천 명이었으나, 1996년에는 266천 명으로 약 70천 명의 입학 정원이 증가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1990년 131천 명에서 1996년 234천 명으로 103천 명이 증가하여 같은 기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수 증가만을 합쳐도 173천 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인문계 졸업자 10명 중 9명이(현재는 8명이 채 안 됨) 그리고 실업계 졸업자 10명 중 3명(현재는 2명이 채 안 됨)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총 진학자수는 1996년 현재 약 438천 명이 된다. 그리고 이 수는 1996년의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500천 명에도 훨씬 미달하는 숫자이다.

대학의 입학정원 속에는 개방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의 입학 정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의 실제 입학 정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물론 대학 지원자 중에는 재수생, 검정고시 출신자가 포함되나 3개교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후로는 재수생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검정고시 출신자수를 1만 명 안팎으로 볼 때, 위에서 지적한 대학의 과잉 공급 사태는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고 본다. 그리고 대학 설립 인가에 준칙주의가 도입됨으로써 대학 설립이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졌고, 준칙주의에 의하여 속속 새로운 대학들이 설립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의 공급 과잉 상태는 현재로도 이미 심각

〈표 2〉 연도별·계열별 고등학교 졸업자

연도	인문계 졸업자	실업계 졸업자	계
1990	487,772	274,150	761,922
1992	465,611	274,677	740,288
1994	423,832	263,962	687,794
1996	395,465	274,696	670,161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0, 1992, 1994, 1996.

〈표 3〉 연도별 대학, 전문대학의 학교수 및 입학정원

연도	대 학		전문대학		계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1990	107	196,550	117	130,520	224	327,070
1992	121	211,740	126	159,410	247	371,150
1994	131	232,555	135	193,070	266	425,625
1996	134	266,195	152	234,275	286	500,470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0, 1992, 1994, 1996.

한 상태에 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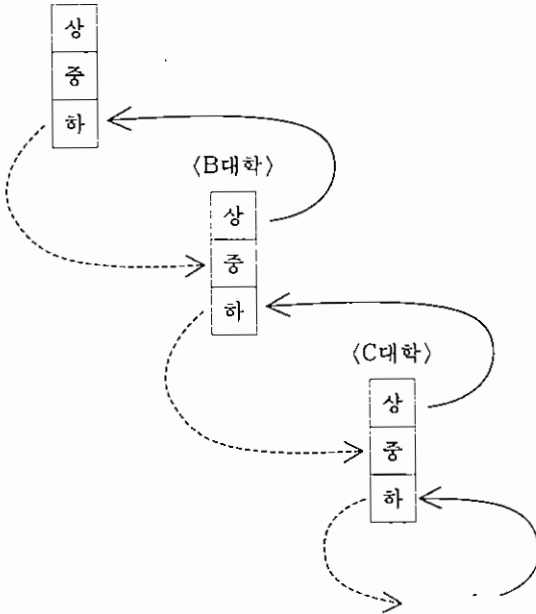
지방 대학의 모 학과는 정원 80명 모집에 2차 지방까지 모두 합격시켜도 40명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4년제 지방 모 대학은 3학년에 올라가면 최초 입학 정원의 절반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가자 하는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는 계속되어 왔다는 이 이율배반적 상황만이 이러한 지방 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와 대량 탈락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다시 편입학 확대를 철회한다고 하여 이들 대학들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고 하여 이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적 수준을 갖춘 소수정예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던 정예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는 대학정원은 소수정예로 엄격하게 통제된다. 현재의 대학 정원령은 그것이 불가피했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념적 뿌리는 정예주의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재학자를 포함하면 고등교육 취학률이 7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도 이미 대중화의 단계로 들어선 지 오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정원령이란 대학정원 통제에 더 이상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확대할 자원이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정원 확대를 재정 확대로, 교육부가 ‘보호’하고 ‘육성’ 정책을 써주기만 하면 지방의 대학들도 과거처럼 정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도 ‘대학정원령’과 동일한 맥락에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대학정원 자율화’는 정원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보호’, ‘육성’, ‘지도’, ‘감독’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 하여 그 문제 해결을 떠나는 교육부에 기대한다는 것은 미봉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학생들에게는 대학을 입학한 후에도 더 나은 교육여건, 자신에게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전공 분야를 찾아서 학교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대학에 들어 온 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를

- A대학 : 사회적 평판도가 가장 높은 대학
 B대학 : 사회적 평판도가 A대학보다 낮은 대학
 C대학 : 사회적 평판도가 B대학보다 낮은 대학
 _____ : 상향흐름(현재 나타나고 있음)
 : 하향흐름(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음)

(A대학)



(그림) 편입학 확대에 따른 학생의 흐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다른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도 있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전공한 교수가 다른 대학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본다. 편입학은 1차적으로 바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편입학 확대 조치가 일부 대학의 중도 탈락을 조장함으로써 이들 대학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편입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의 흐름이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평판이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으로만 향하는 상향 흐름이 주류를 이루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학사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학점 평점이 학교가 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사경고 제적'함으로써 중도 탈락시킨다면, 편입학의 하향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대학들도 외국의 우수한 대학과 경쟁하기에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 향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들의 체중 감량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편입학을 통한 하향 흐름도 활발해질 것이다.

미달 사태와 중도 탈락자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각 대학은 현재와 같이 방만한 백화점식 운영을 탈피하여 대학의 재정력과 행정력을 이 곳에 집중함으로써 그 분야를 특성화하는 데 성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 유치 및 탈락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슬러(Don Hossler, 1984)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일수록, 평소에 교수와 빈번히 접촉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대학을 중도에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내의 대학들도 교육의 질 향상, 대학의 내부 구조 개편, 특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생들의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본격적 연구가 필요하다. ▣

박부권/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역서로 『교육과 이데올로기』 등이 있고, "교육과정의 민주화와 교육의 자율성"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